정호영 빼고 1기 내각 과반 임명…민주, 한덕수 처리 고심

윤 대통령,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명 속도전
민주 '한덕수 불가론' 강화 속 지방선거 역풍에 신중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1기 내각' 절반가량 임명을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제 낙마시켜야 한다는 '한덕수 불가론' 기류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오전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후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까지 11개 부처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다.

18개 부처 장관의 과반을 채우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점을 고려하면 초반 속도전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는 17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내각 완성까지 무려 195일이 걸렸다.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영향이 컸다.

윤 대통령측은 '추경'이라는 민생 이슈를 비중있게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추경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개의 조건(국무위원 11명)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포함해 새 정부 국무위원이 10명으로 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1명만 참석하면 국무회의가 가능해졌다.

전임 정부 국무위원을 아예 배제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뜻이다.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 6·1지방선거를 각각 다루는 부처 수장이라는 점에서도 임명이 불가피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민주당이 각각 자녀 편입 의혹과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고발을 벼르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임명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갈림길에 놓인 국회 상황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전임 김부겸 총리가 물러나면서 현재 총리는 공석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총리 없이 1기 내각의 정상 출범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전날에도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뇌관이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초대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할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인사청문 위원이나 원내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된 박 장관과 이 장관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도 굳이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쉽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는 '협력 모드'로 갈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거대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기라는 점도 민주당이 부적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후보자 임명이 불가능하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장녀에게 꽃다발 받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가족 대표인 장녀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추경 47조 확대 제안…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 적용

"소상공인·기업 두터운 보상"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알파(α)' 규모보다 14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가 내놓은 안은 총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경선 투표 위법 의혹' 가처분 신청 기각

공천탈락 일부 예비후보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경선 투표 위법'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당과 광주시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1 민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2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7명의 예비후보들이 신청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공천 탈락 일부 예비후보들은 경선 투표에 개표 참관인 배석이 없었고, 전자 투·개표 실시에 대한 안내 등을 직접 받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당 당헌·당규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투표에 반드시 개표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는 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투표 진행 업체 및 방법 안내 규정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업체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 경선결과가 결정되기 전 외부 유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투표가 완료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투표에 관한 미가공데이터(Raw data)도 투표결과 집계에 계산상 오류나 왜곡, 그 밖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15명의 예비후보들은 이날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투개표가 참관인 없이 진행된 점, 경선 결과 사전 유출 의혹, 경선 결과 미안내 등 의 경선 과정에 대한 불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면서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동성애·위안부 비하 논란' 김성회 비서관 이번엔 "조선시대 여성 절반 성적 쾌락 대상"

대통령실 "좀 더 지켜보겠다"

대통령실은 12일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SNS 글 논란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 비서관에 대해 야권에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입장이 없다고 한 어제와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진영을 불문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임명 철회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영을 불문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요"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 표현한 글 등을 실었다가 페이스북으로부터 활동 중단 조치를 받았다.

최근 비서관 임명 후 과거 글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전날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페이스북에 "(조선시대에는) 결국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이라고 적어 재차 논란을 낳았다.

그는 앞서 지난해 3월 인터넷매체인 '제3의 길' 기고문에서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면서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 국뽕에 취해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페이스북 글은 '제3의 길' 기고문도 논란이 되자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연합뉴스

80억, 호텔/ 무인텔 매매 교환

•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내
• 대지 2980평, 건물 1270평, 계획관리
• 건물 3동, 객실 52개, 관광호텔 허가 有
• 요양(병)원, 콘도, 리조트, 연수원 등 업종 변경가
• 법인체 양도양수가, 수도권 토지와 교환 가

주인 직거래. 010-3605-5000

21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오천경매. 010-3605-5000